

제258회 연제구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부록)

연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 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최홍찬·김현규·김미화·권종현·차성민·권성하·정홍숙·변준호 의원 발의)·· 20 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23 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27 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0 면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36 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권종현·차성민·김기준·김현규·권성하·정홍숙·소수련·김미화·이의찬·최홍찬 의원 발의) 38 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45 면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복지위원회)	48 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 · 김기준 · 권성하 · 변준호 · 차성민 · 권종현 · 정홍숙 · 이의찬 · 김미화 · 소수련 · 최홍찬 의원 발의)	51 면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56 면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8 면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64 면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7 면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77 면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 · 소수련 · 이의찬 · 정홍숙 · 권성하 · 변준호 · 김기준 · 차성민 · 김현규 · 최홍찬 의원 발의)	80 면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85 면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7 면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91 면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김기준 · 정홍숙 · 권성하 · 변준호 의원 발의)	93 면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99 면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 (소수련 · 변준호 · 김미화 · 김현규 · 권성하 · 정홍숙 · 이의찬 의원 발의)	101 면
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108 면
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 · 최홍찬 · 김미화 · 정홍숙 · 이의찬 · 김현규 · 권성하 · 변준호 · 김기준 · 차성민 의원 발의)	110 면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 ·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116 면
27.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 ·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 · 정홍숙 · 최홍찬 · 권성하 · 권종현 · 김기준 · 김현규 · 변준호 · 이의찬 · 김미화 · 소수련 의원 발의)	118 면
2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환경위원회)	124 면
29.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 · 정홍숙 · 김기준 · 차성민 · 권종현 · 변준호 · 김현규 · 김미화 · 소수련 · 이의찬 의원 발의)	126 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9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9일, 30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부구청장 이수봉)

가. 제출사유

- 세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행정환경 변화 등에 의한 현안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함.

나. 주요골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 5,593억원 (본예산 대비 487억원 중)

(단위: 천원, %)

회계명	제1회 추경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59,336,809	510,565,811	48,770,998	9.55
일반회계	551,001,988	502,409,877	48,592,111	9.67
특별회계	8,334,821	8,155,934	178,887	2.19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주요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51,001,988	502,409,877	48,592,111	9.67	
지방세수입	71,004,000	71,004,000	0	0.00	- 0
세외수입	17,111,311	16,932,239	179,072	1.06	· 경상적세외수입 107,903 · 임시적세외수입 71,169
지방교부세	18,000,000	18,000,000	0	0.00	- 0
조정교부금등	62,011,573	40,788,000	21,223,573	52.03	· 일반조정교부금 19,723,573 · 특별조정교부금 1,500,000
보조금	359,593,476	333,196,134	26,397,342	7.92	· 국고보조금 11,632,423 · 시비보조금 14,764,919
보전수입 내부거래	23,281,628	22,489,504	792,124	3.52	· 순세계잉여금 △6,125,331 · 이월금반환금등 6,917,455

■ 증가액 486억 중 교부금 및 구비 자원 153억, 국·시비 보조금 264억, 이월금(반납금) 69억

○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주요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51,001,988	502,409,877	48,592,111	9.67	
정 책 사 업	468,673,199	423,032,094	45,641,105	10.79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585,368
재 무 활 동	4,420,190	1,507,860	2,912,330	193.14	· 보전지출 2,912,330
행정운영경비	77,908,599	77,869,923	38,676	0.05	· 인력운영비 53,506 · 기본경비 △14,830

○ 특별회계 총괄

(단위: 천원, %)

특별회계명	제1회 추경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34,821	8,155,934	178,887	2.19
국 민 체 육 센 터	2,640,784	2,554,719	86,065	3.37
의 료 급 여 기 금	563,871	469,516	94,355	20.10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491,152	483,000	8,152	1.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대지보상	3,585	3,585	0	0.00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2,912	2,500	412	16.48
주 차 장	4,518,103	4,558,471	△40,368	△0.89
지 하 수 관 리	114,414	84,143	30,271	35.98

○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단위: 천원)

특별회계명	증감액	세입	세출
합 계	178,887		
국민체육 센터	86,065	· 순세계잉여금 86,065	· 자산취득비(제습기, 헬스기구) 8,600 · 예비비 77,465
의료급여 기금	94,355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627 · 사·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906 · 순세계잉여금 34,822	· 예비비 △3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94,358
원자력발 전지역개 발	8,152	· 방사능방재훈련 지원금 8,000 · 순세계잉여금 152	· 방사능방재훈련 추진 8,000 · 예비비 152
주거환경 개선사업	412	· 순세계잉여금 412	· 변상금 부과 및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412
주차장	△40,368	· 순세계잉여금 △230,368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90,000	· 예비비 △40,368
지하수 관리	30,271	·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설치지원(균특) 25,226 · 유출지하수이용시설 설치지원(시비) 2,523 · 순세계잉여금 5,125 · 예탁원금회수수입 7,647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지원 30,272 · 예비비 △1

□ 기금 규모: 총 819.7억원 (본예산 대비 92.8억원 중)

(단위: 천원, %)

기 금 명	제1회 추경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970,194	72,689,802	9,280,392	12.77
지 역 발 전 사 업 기 금	42,163,065	41,779,174	383,891	0.92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통 합 계 정)	3,800,130	2,800,625	999,505	35.69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재 정 안 정 화 계 정)	29,116,087	21,779,150	7,336,937	33.69
고 향 사 랑 기 금	108,203	104,215	3,988	3.83
자 활 기 금	919,244	772,184	147,060	19.04
양 성 평 등 기 금	566,837	565,970	867	0.15
재 난 관 리 기 금	3,783,570	3,532,784	250,786	7.10
도 시 재 생 기 금	761,206	665,498	95,708	14.38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555,097	502,944	52,153	10.37
식 품 진 흥 기 금	196,755	187,258	9,497	5.07

○ 기금 수입·지출 증감내역

(단위: 천원)

기금명	증감액	세 입	세 출
합 계	9,280,392	9,280,392	9,280,392
지역발전사업기금	383,891	• 공금예금이자수입 1,900,000 • 예치금회수 △1,516,109	• 일반예치금 383,8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 정)	999,505	• 공금예금이자수입 63,435 • 예치금회수 936,070	• 일반예치금 801,858 • 예수금원금상환 197,6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336,937	• 공금예금이자수입 252,334 • 예치금회수 7,084,603	• 일반예치금 7,336,937
고 향 사 랑 기 금	3,988	• 공금예금이자수입 △1,675 • 그외수입 25,943 • 예치금회수 △20,280	• 일반예치금 3,988
자 활 기 금	147,060	• 예치금회수 147,060	• 일반예치금 147,060
양 성 평 등 기 금	867	• 예치금회수 867	• 일반예치금 867
재 난 관 리 기 금	250,786	• 예치금회수 250,786	• 일반예치금 250,786
도 시 재 생 기 금	95,708	• 예치금회수 95,708	• 일반예치금 95,708
옥외광고발전기금	52,153	• 예치금회수 52,153	• 일반예치금 52,015 • 기타반환금등 138
식 품 진 흥 기 금	9,497	• 시도비보조금등 △5,000 • 예치금회수 14,497	• 일반예치금 9,497

다. 주요내용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93억 3,680만 9천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87억 7,0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일반회계는 485억 9,211만 1천원이 증액되어 5,510억 198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888만 7천원이 증액되어 83억 3,482만 1천원임.
-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907만 2천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212억 2,357만 3천원 증액, 보조금 263억 9,734 2천원 증액, 보전수입 내부거래 7억 9212만 4천원 증액되어 총 485억 9,2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4,686억 7,319만 9천원, 재무활동비 44억 2,019만원, 행정 운영경비 779억 8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 중 주요 세입예산은 178,88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8,000천원, 보조금 27,749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3,138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84,529천원, 재무활동 94,35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음.

○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 786만원, 예치금 회수 761억 2,134만 4천원 등 총 819억 7,019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1억 6,751만원, 예치금 658억 2,129만 1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원 9,764만 7천원 등을 편성하였음.
-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9개 기금 중 이번 추경에서는 9개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 중 수입계획은 각 기금의 공공 예금이자 수입과 2024년 결산에 따른 연도말 이월액을 조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미수납금 2,594만원 3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각 기금의 2024년 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예수금원금상환 1억 9,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수경)

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105억 6천5백만원 대비 9.55%, 487억 7천만원 증가한 5,593억 3천6백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5,024억 9백만원 대비 9.67%, 485억 9천2백만원 증가한 5,510억 1백만원을,
 - 특별회계는 본예산 81억 5천5백만원 대비 2.19%, 1억 7천9백만원 증가한 83억 3천4백만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9.67% 증가한 485억 9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1억 7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212억 2천2백만원, 보조금 263억 9천7백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 세출 부분은 국·시비 교부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비 456억 4천1백만원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29억 1천2백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천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주요 사업으로는 구청사 대지 중 시유지 분할매입,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연제둘레길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연제만화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사서) 보수, 연산2동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구비를 자체 편성하였고,

연제둘레길 조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연수로 일원 침수예방사업, 연산교 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국·시비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계속비사업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내용은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특별조정교부금 15억 확보로 구비 부분을 감액하고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임.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19%,증가한 83억 3천4백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주요 세입 증감사항은 세외수입 8백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2천7백만원 증가, 순세기잉여금과 예탁금및예수금 1억 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세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이 9천4백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에서 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본예산 25억 5천4백만원 대비 3.37%, 8천6백만원을 증가한 26억 4천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 6천9백만원 대비 20.1%, 9천4백만원을 증가한 5억 6천3백만원

-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 8천3백만원 대비 1.69%, 8백만원을 증가한 4억 9천1백만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2백 50만원 대비 16.48%, 41만원 증가한 5백 91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 45억 5천8백만원 대비 0.89%, 4천만원을 감소한 45억 1천8백만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본예산 8천 4백만원 대비 35.98%, 3천만원 증가한 1억 1천4백만원임.

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임.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예산 726억 9천만원 대비 12.77%인 92억 8천만원이 증가된 총 규모는 819억 7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변동분, 일반예치금 및 예수금원금 상환 등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별로 살펴보면
 - **지역발전사업기금**은
본예산 417억 7천9백만원 대비 0.92%, 3억 8천4백만원 증가한 421억 6천3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본예산 28억원 대비 35.69%, 10억원 증가한 38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본예산 217억 7천9백만원 대비 33.69%, 73억 3천7백만원 증가한 291억 1천6백만원
 - **고향사랑기금**은
본예산 1억 4백만원 대비 3.83%, 4백만원 증가한 1억 8백만원
 - **자활기금**은
본예산 7억 7천2백만원 대비 19.04%, 1억 4천7백만원 증가한 9억 1천9백만원
 - **양성평등기금**은
본예산 5억 6천5백97만원 대비 0.15%, 86만원 증가한 5억 6천6백83만원
 - **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 35억 3천3백만원 대비 7.1%, 2억 5천만원 증가한 37억 8천3백만원

- 도시재생기금은

본예산 6억 6천5백만원 대비 14.38%, 9천6백만원 증가한 7억 6천1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본예산 5억 3백만원 대비 10.37%, 5천 2백만원 증가한 5억 5천5백만원

- 식품진흥기금은

본예산 1억 8천7백만원 대비 5.07%, 9백만원 증가한 1억 9천6백만원

마. 종합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추가·변경 등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을 조정하고, 필수경비 예산 조정 및 일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및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지역 상권활성화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억 2천3백4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음.
 - (재)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은 중앙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2020년~2024년)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었음.
 - 이에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마케팅 홍보비를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재단에 대해 계속 많은 구비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할 것임.
- 또한, 증액사업의 경우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사업 미집행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220억원 대비 27.84%인 61억원을 삭감한 158억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해당 예산만큼 현안사업에 조기 활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본예산 23억 7백만원 대비 198.79%인 45억 8천5백만원이 증가된 68억 9천2백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대비 1.25%로 편성하였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1% 범위 내)에 비해 예산 편성 한도는 별도로 없으나, 과도한 예산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 변경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 기금운영계획변경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영으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 일반회계

- 세입부문: 변동사항 없음
- 세출부문: 증액 125,000천원, 감액 223,000천원
※ 내보유보금으로 편입 98,000천원

▶ 특별회계

- 세입부문: 변동사항 없음
- 세출부문: 변동사항 없음

나.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붙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479-1
------	-------

제안년월일: 2025. 5. 1.

제안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수정이유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과목의 수정사항이 있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예산 총칙 수정안

구청장 제출 예산안	수정안
제1조~제3조 (생략)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u>8,891,995천</u>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u>8,989,995천</u> 원으로 한다.
제5조~제6조 (생략)	제5조~제6조 현행과 같음

나. 예산 수정안 규모

1) 일반회계 수정안

- ① 세입예산: 수정사항 없음
- ② 세출예산

(단위:천원)

소관별	구청장제출 예산안	수 정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551,001,988	223,000	223,000	551,001,988

2) 특별회계 수정안

- ① 세입예산: 수정사항 없음
- ② 세출예산: 수정사항 없음

붙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부. 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일반회계

○ 세입: 변동사항 없음

○ 세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 요구액	수정 예산액	증(감)액	수정내역	예산안 페이지
총 계					0			
기획감사실 계						98,000		
자원관리(예비비/예비비)	예비비의 운용	예비비의 관리	801 예비비	8,881,995	8,989,995	98,000	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98,000천원 증액	p.150
경제도화국 계						△98,000		
일자리경제과 계				228,000	128,000	△98,000		
서민경제생활관리(산업·중소기업지원·에너지/산업·중소기업지원)	서민경제생활안정	상권활성화·저당 운영	308 출연금	228,000	0	△228,000	01 출연금 ○(자)연계구상권활성화재단 출연 228,000천원 삭감	p.178
서민경제생활관리(산업·중소기업지원·에너지/산업·중소기업지원)	서민경제생활안정	지역상권활성화 추진	401 시설비·무대비	0	128,000	128,000	01 시설비 ○및거리 조성 120,000천원 증액 03 시설·무대비 ○상권활성화구역 시설물 유지 보수 등 8,000천원 증액	p.178

2. 특별회계

○ 세입: 변동사항 없음

○ 세출: 변동사항 없음

**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외 소관 증감액 없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9-2
----------	-------

제안년월일: 2025. 5. 1.

제안자: 김기준, 최홍찬, 김현규,
김미화, 권종현, 차성민,
권성하, 정홍숙, 변준호

1. 수정이유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예산 총칙 수정안

구청장 제출 예산안	수정안
제1조~제3조 (생략)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u>8,891,995천원</u> 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u>8,969,995천원</u> 으로 한다.
제5조~제6조 (생략)	제5조~제6조 (현행과 같음)

나. 예산 수정안 규모

1) 일반회계 수정안

- ① 세입예산: 수정사항 없음
- ② 세출예산

(단위: 천원)

소관별	구청장제출 예산안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액	증액	
일반회계	551,001,988	223,000	223,000	551,001,988

2) 특별회계 수정안

- ① 세입예산: 수정사항 없음
- ② 세출예산: 수정사항 없음

붙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1부. 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본회의

1. 일반회계

○ 세입: 변동사항 없음

○ 세출: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권선목	예산 요구액	수정 예산액	증(감)액	수정내역	예산안 페이지
총 계					0			
기획감사실 계						78,000		
자원관리(예비비/예비비)	예비비의 운용	예비비의 관리	801 예비비	8,891,995	8,969,995	78,000	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78,000천원 증액	p.150
경제조화국 계						△78,000		
일자리경제과 계				229,000	145,000	△78,000		
서민경제생활관리(산업 중소기업협력에너지/산업 중소기업일반)	서민경제생활안정	상권활성화 자단 운영	308 출연금	229,000	0	△229,000	01 출연금 ○(자)연계구상권활성화자단 출연 229,000천원 삭감	p.178
서민경제생활관리(산업 중소기업협력에너지/산업 중소기업일반)	서민경제생활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101 민간비	0	20,000	20,000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상권활성화 업무 추진 인력 20,000천원 증액	p.178
서민경제생활관리(산업 중소기업협력에너지/산업 중소기업일반)	서민경제생활안정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401 시설비및 부대비	0	125,000	125,000	01 시설비 ○유통거리 조성 120,000천원 증액 03 시설부대비 ○상권활성화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 5,000천원 증액	p.178

2. 특별회계

○ 세입: 변동사항 없음

○ 세출: 변동사항 없음

**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외 소관 증감액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496
------	-----

제안연월일: 2025. 4. 22.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방청 허가권자 및 방청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방청 허가권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6조제1항)
- 나. 방청 제한 대상자에 관한 규정 수정(안 제86조제2항)
- 다.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고지 규정 신설(안 제86조제7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가 개회 중일 때 회의장의 방청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한다.

1. 본회의장: 의장

2.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

제86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행동”을 “행동”으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배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방청의 제한) <신 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의회가 개회 중일 때 회의장의 방청 제 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 가하지 않는다.	1. 본회의장: 의장 2.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
1. · 2. (생 략)	② ----- ----- ---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 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 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3. 행동----- ----- 사 람
<신 설>	4. 그 밖에 방청을 허가하지 않 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 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장인영)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해석상 어색한 문장 수정(안 제13조)
- 2) 공유재산 대부요율 근거 규정 개정 및 신설(안 제18조)
- 3)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근거 규정 신설(안 제23조제4항)
- 4)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대상 추가(안 제25조)
- 5)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규정 신설(안 제7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25. 2. 25. ~ 2025. 3. 17.) 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등을
 - 안 제2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근거를
 - 안 제25조에 공유재산 대부료의 추가된 감면대상을
 - 안 제74조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횟수 규정을 명시함.
- 공유재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유가에 이은 수출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공장 신축 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수익 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고,
-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대부료 등 감면 대상 시설로 신설하며
- 그 외 대부료 분할 납부 근거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액, 횟수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이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1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 14일
제출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해석상 어색한 문장 수정(안 제13조)
- 나. 공유재산 대부요율 근거 규정 개정 및 신설(안 제18조)
- 다.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근거 규정 신설(안 제23조제4항)
- 라.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대상 추가(안 제25조)
- 마.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규정 신설(안 제7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2. 25. ~ 2025. 3. 17.) 결과 :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세금의 평가”를 “전세금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6호 본문 중 “5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하고,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 기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년 3회 이내 분할납부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2년 6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 3년 9회 이내 분할납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적용례) 제18조제5항제6호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납기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의 감면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적용례) 제7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 ----- -- <u>전세금의 평가 등</u> ----- ----- ----- ----- -----.
제18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④ (생략) ⑤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5. (생략) 6. 상시 종업원 <u>50인 이상</u> 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u>50퍼센트</u> 이상을 당해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생략) <u><신설></u>	제18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1.~5. (현행과 같음) 6. ----- <u>30인 이상</u> ----- ----- <u>30퍼센트</u> ----- ----- ----- 7. (현행과 같음) 8. 「 <u>사회적 기업 육성법</u> 」 제2조 제1호의 사회적 기업, 「 <u>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u>

	<p><u>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u></p>
<p>제23조(대부료의 납기)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23조(대부료의 납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u></p>
<p>제25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25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u> <u>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u>

<p>④·⑤ (생략)</p> <p><신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p>
<p>제74조 <신설></p>	<p>제74조(변상금의 분할납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년 3회 이내 분할납부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2년 6회 이내 분할납부 3. 200만원 초과 : 3년 9회 이내 분할납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변준호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변준호 의원)

가. 제안이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특례보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7호)
-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여 특례보증에 관한 정의를
- 안 제14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소상공인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및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게 되어 임대료 장기미납, 대출이자 연체로 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음.

○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고자 이미 여러 구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 부산에서 특례보증을 규정한 구는 12개 구(강서, 동래, 사상, 사하, 기장, 영도, 서, 남, 수영, 중, 해운대, 부산진)가 있음.

○ 이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변준호 의원)

의안번호	486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변준호, 권종현, 차성민, 김기준,
김현규, 권성하, 정홍숙, 소수련,
김미화, 이의찬, 최홍찬

1. 제안이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례보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7호)
-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7.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시행규칙)”을“(특례보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제외 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제16조(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특례보증</u> ”이란 <u>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u> 6. “ <u>금융기관</u> ”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7. “ <u>신용보증기관</u>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14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14조(특례보증 지원) ① <u>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u>

<신 설>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례보증에 필
요한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
서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③ 특례보증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제외 대상) 소상공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지원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신 설>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
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16조(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
보증 등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용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
우
2. 사업장을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
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4조(특례보증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특례보증재원 출연금: 연 1억원

- 특례보증 한도: 소상공인 사업자별 3천만원 이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구분							
지출	○ 특례보증재원 출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김현규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규 의원)

가. 제안이유: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이것은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하여 기업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기업과 기업유치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제4호)
- 2)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25. 4. 15. ~ 4. 21.): 제출의견 1건(일자리경제과)

○ 해당 조례는 연제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로 관계법령(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업 등이 결정되지 않은 권고적 형식의 내용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등 세부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연제구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 지원도 포함하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제한적 문구를 삭제하여 포괄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삭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함.

의 원 발 의 안	수 정 안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예산의 범위 안에서</u>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 2.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 2.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조례안은 양질의 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나아가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여 기업과 기업유치에 대한 정의를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지금 세계는 관세전쟁 및 고물가·고금리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국내외 정세 불안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이런 위기 속에 타지역에서 우리구로 기업 이전 또는 설립시, 구 재정여건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연제구만의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정착 유도로 일자리창출, 세수확보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됨.
- 물론, 청년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제도가 있지만, 그 외 기업이 우리구에 유치되거나 이전해 오는 경우 구 단위에서의 마땅한 지원이 없고 대부분의 자치구도 그런 실정임.

- 국가에서는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임차료 또는 부지 매입·건축·분양비 대출금 이자의 일정 비율(50~80%)을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 본사, 공장 등 이전시 설비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보조,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 이에 연제구에서도 우리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이나 우리구 안에 설립될 경우, 관심을 가지고 구 재정여건에 맞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해야 할 것임.
- 이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487-1
------	-------

제안년월일: 2025. 4. 23.

제안자: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적 지원도 포함하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제한적 문구의 삭제를 통해 포괄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구 삭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을 “추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			
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	-----			
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	-----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예산</u>	----- <u>추진</u> -----			
<u>의 범위 안에서 추진</u> 하거나 지	-----.			
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현규 의원)

의안번호	487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김현규, 김기준, 권성하, 변준호,
차성민, 권중현, 정홍숙, 이의찬,
김미화, 소수련, 최홍찬

1. 제안이유

양질의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이것은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하여 기업유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업과 기업유치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제4호)
- 나. 기업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업
2.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u>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u>
<u><신설></u>	4. “기업유치”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u><신설></u>	제5조의2(기업유치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u>행정·재정 지원 사업</u>

	<u>2.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u>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의2 기업유치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기업유치 지원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 시행 방식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문화국장 김종석)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합창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 2) 합창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3) 합창단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 4) 합창단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7조~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25. 2. 18. ~ 2025. 3. 10.) 결과: 제출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 반영 계획서 첨부【붙임 1】
- 5)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6)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합창단원의 자격에 대한 수정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합창단원의 위촉 및 임기에 대한 수정된 사항을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신설하여 합창단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1995년 창단된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다양한 수상 경력과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구민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
-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합창단에 입단하고 싶은 구민이 있다면, 신규 채용시 누구에게나 공평한 채용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명확한 채용기준을 통해 채용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합창단원에게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합창단원 전형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을 반영하고,
- 합창단원 중 발성지도자를 추가하여 합창단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3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 14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
고 연제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합창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 나. 합창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5조)
- 다. 합창단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 라. 합창단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7조~제9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25. 2. 18. ~ 3. 1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 ▷ 반영 계획서 첨부【붙임 1】
 - 5)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 6)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의 보급으로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
2.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지역문화발전 및 구민화합에 기여
3. 연제구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구 위상제고 및 구민의 자긍심 고취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각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사업장에 근

무하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합창단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후 재임단을 원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전형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형위원장은 합창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이내

④ 전형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전형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전형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전형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전형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형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전형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해촉)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된 기간과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에 5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
4. 합창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합창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 부재 시에는 지휘자 임무를 대행한다.
- ④ 합창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가해야 한다.
- ⑤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이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연 및 대회참가) ① 합창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각종 대회참가와 수시공연은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다.

제14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합창단원에게는 공연, 대회 및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후원회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호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창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지휘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지휘자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붙임 1】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부산연제004			
정책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이민주	전화번호	051-665-4066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4조(구성) ③ 여성합창단의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u>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선정 시 여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u>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연제구 여성합창단은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예술진흥과 연제구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여성들로 구성하고 있어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제7조(전형위원회) ③ 전형위원장은 합창단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u>성별을 고려하여</u> 임명 또는 위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전형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함.	
<div>2025년 03월 04일</div> <div>문화체육과장</div> <div>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div>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가. 제안이유: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 11. 15.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다.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총 연면적 2,982.29㎡ 중 입주기관 6개소(791㎡)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정원
		대지	건물		
연제구 연산종합 사회복지관	연제구 봉수로 17 (연산동)	1,573.50㎡	2,191.29㎡ (지하1층/지상5층)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	16명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11. 16. ~ 2030. 11. 15. (5년)
- 위탁사무: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전반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598,700천원(2025년도 본예산 기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민간 운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적 절차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였고,
- 다양한 민간 자원, 즉 후원금, 자원봉사자, 민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끌어내는데 용이하고, 다양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었음.

- 이에,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선정 시에 수탁기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를 잘 구축하여 공공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84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 14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제안이유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 11. 15.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연제구의회 의 동의 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나. 필 요 성

- 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m ²)		주요시설	정원
		대지	건물		
연제구 연산종합 사회복지관	연제구 봉수로 17 (연산동)	1,573.50m ²	2,191.29m ² ¹⁾ (지하1층/지상5층)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	16명

¹⁾ 총 연면적 2,982.29m² 중 입주기관 6개소(791m²) 제외

라.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5. 11. 16. ~ 2030. 11. 15. (5년)
- 위탁사무: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전반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소요예산: 598,700천원(2025년도 본예산 기준)

마.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 붙임1

3. 참고사항(관계법령) ▷ 붙임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붙임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業 務 報 告

제 목: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보고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 11. 15.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전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근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5. 11. 16. ~ 2030. 11. 15. ▷ 5년

□ 위탁대상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現 수탁자	現 위탁기간
연산종합 사회복지관 (관장 전현수)	봉수로 17 (연산동)	2,191.29㎡ (지하1층,지상5층)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당, 프로그램실 등	사회복지법인 혜원 (대표 정일현)	2020.11.16.~ 2025.11.15. (5년)

□ 위탁사무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
련 업무처리 안내에 명시된 사업
- 기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III 검토 사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P.72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 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 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 제도인 보조사업, 사용 수익 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따라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맡기는 위임,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 사적 수익을 위한 사용수익 허가, 지자체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 단체에 맡기는 공공위탁과는 그 성격이 구분되므로 상호경쟁 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 방 식이 적정함.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p>○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거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3대 기능(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하므로 공공성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가 높음.</p> <p>○ 또한, 해당 사무는 서비스의 장기적·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관련 법령 및 각종 규정·지침 등에 따라 지자체의 주도하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p>
③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등) 정도 등	<p>○ 구에서 직접 운영 시 시설장 및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원 증원 등 추가 예산 소요로 인한 재정적 부담 증가가 예상됨.</p> <p>○ 민간위탁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업무 및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를 수행하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담당 부서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p>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등	○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제출받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3년 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설 평가를 실시하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가능성, 서비스 공급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p>○ 수탁기관은 관련 법령, 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시행하므로 시설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가능함.</p> <p>○ 특히, 사회복지관은 인사, 회계 등의 업무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 등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가 용이함.</p>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 사회복지관 운영의 8대 기본원칙(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 중립성, 투명성) 중 지역성, 전문성, 자율성, 자원활용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유리함.

IV

검토 결과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적합

-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구에서 직접 운영 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해당 사무수행의 전문성 부족 및 경제적 비효율성이 예상되므로,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V

행정 사항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25. 4월 중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5. 4월 중
-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 2025. 7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5. 8~9월 중
- 위·수탁계약 체결 ▷ 2025. 10월 중. 끝.

붙임2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하면서 예산이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제외하되, 예산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사무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3.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김미화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3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화 의원)

가. 제안이유: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안 제4조 ~ 제5조)
- 4)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화)

- 본 조례안은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피해지원사업을
 -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최근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소형화로 개인휴대 용이, AI기술 접목에 따른 실시간 네트워크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 및 개인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임.

※2023년 8,983명(2022년 7,979명에 비해 13% 증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발간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이에 따라 구에서도 상위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 반영 및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한 것은 성범죄와 폭력에 특별히 취약한 여성의 보호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수립 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가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107개, 부산은 4개(동래, 동, 강서, 남)가 해당됨.
- 본 제정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일상 보장과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되며
- 그 외,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미화 의원)

의안번호	488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김미화, 소수련, 이의찬, 정홍숙,
권성하, 변준호, 김기준, 차성민,
김현규, 최홍찬

1. 제안이유

디지털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성적 괴롭힘,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비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안 제4조 ~ 제5조)
- 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인식개선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각 호의 내용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 시점에서 시행하게 될 정확한 정책사업이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고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연제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5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규정 현행화(안 제2조)
- 2)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 현행화(안 제3조의2제2항)
- 3)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별표) 현행화(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4. 15. ~ 2025. 4. 21.) 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5
----------	-----

제출년월일 : 2025년 4월 14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제안사유

- 관련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 규정 현행화 (안 제2조)
- 나. 점용료 반환 절차 규정 현행화 (안 제3조의2제2항)
- 다. 과태료 부과 기준 현행화 및 상한액 규정 추가(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사항 없음
- 다. 합 의 : 별도합의 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2. 25. ~ 3. 2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특기사항 없음
- 5)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7조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령	부과기준	과태료상한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2호	초과점용 면적(㎡) ×20,000원	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3호	점용면적(㎡) ×20,000원	1,5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 “ 이라 한다)</p> <p>제61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제3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생략)</p> <p>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p>	<p>제2조(도로 점용허가) -----</p> <p>-----</p> <p>제61조제3항 -----</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영 제71조제6항 및 제7항--</p> <p>-----</p>																					
<p>[별표]</p> <p>과태료 부과 기준 (제7조 관련)</p> <table><tr><th>위반사항</th><th>관련법령</th><th>부과기준</th></tr><tr><td>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td><td>법 제117조제2항 제1호</td><td>초과점용면적 (㎡)×20,000원</td></tr><tr><td>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td><td>법 제117조제2항 제2호</td><td>점용면적(㎡) ×20,000원</td></tr></table>	위반사항	관련법령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1호	초과점용면적 (㎡)×2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2호	점용면적(㎡) ×20,000원	<p>[별표]</p> <p>과태료 부과 기준 (제7조 관련)</p> <table><tr><th>위반사항</th><th>관련법령</th><th>부과기준</th><th>과태료상한액</th></tr><tr><td>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td><td>법 제117조 제2항 제2호</td><td>초과점용면적 (㎡)×20,000원</td><td>2,000,000원</td></tr><tr><td>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td><td>법 제117조 제2항 제3호</td><td>점용면적(㎡) ×20,000원</td><td>1,500,000원</td></tr></table>	위반사항	관련법령	부과기준	과태료상한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초과점용면적 (㎡)×20,000원	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점용면적(㎡) ×20,000원	1,500,000원
위반사항	관련법령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1호	초과점용면적 (㎡)×2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17조제2항 제2호	점용면적(㎡) ×20,000원																				
위반사항	관련법령	부과기준	과태료상한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법 제117조 제2항 제2호	초과점용면적 (㎡)×20,000원	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점용면적(㎡) ×20,000원	1,500,000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김기준 외 3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5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기준 의원)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 개정시 누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 추가 신설(안 제6조)

나.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5. ~ 2025. 4. 21.)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 개정 시 조문을 이동하면서 누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김기준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안건임.
- 승강기는 입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용시설로 노후됨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 및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승강기 교체 및 보수”를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함.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개정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함.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2020. 2. 4. 의원 발의 조례 개정시 제2조 및 제4조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부분을 변경된 조번호로 개정하지 않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연제구 관내 소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기준 의원)

의안번호	489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김기준, 정홍숙, 권성하, 변준호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원대상사업에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 개정시 누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사업 추가 신설(안 제6조)
- 나.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1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11. 승강기 교체 및 보수

1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제7조 중 “제4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설>	11.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신설>	12.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비용
11.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사업	13. ----- 제14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인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제7조(지원신청) 제6조제1항---- ----- ----- ----- ----- -----

동의를 얻은 대표자를 포함한 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소규모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 ----- ----- -----.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 -- 제7조-----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 ----- 제8조제2항-----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3. (생략)	② 3.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

<p>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p> <p>2. ~ 5. (생략)</p>	<p>-----</p> <p>-----</p> <p>-----</p> <p>-----.</p> <p>1. 제9조제1항-----</p> <p>-----</p> <p>2. ~ 5. (현행과 같음)</p>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려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소수련 외 6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5년 4월 25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수련 의원)

가.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등 정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15조)

2)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규정 및 별지서식 삭제
(안 제2조, 안 제16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3)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15. ~ 2025. 4. 21.) 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 및 시행(2021. 6. 9.)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등 정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전부개정)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서 제명변경)

(폐 지) 도로명주소대장규칙

-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2021. 1. 28.~ 2021. 3. 9.)중 행정안전부에서 조례표준안이 배포되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2021. 6. 7. 조례를 전부개정(2021. 6. 9. 시행)한 바 있음.
- 다만, 2021. 6. 9. 최종 공포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26호)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5호)에는 공고문에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이 있어
- 안 제2조, 안 제16조 및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은 삭제하고,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안 제3조,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를 정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소수련 의원)

의안번호	490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소수련, 변준호, 김미화, 김현규,
권성하, 정홍숙, 이의찬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시행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 등 정비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
- 나.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규정 및 별지서식 삭제
- 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 및”을 “「도로명주소법」, ”으로, “시행령”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법”을 “「도로명주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작비용의 징수는”을 “제작비용을”으로, “제작비용을 징수”를 “징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 영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제1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생략)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별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현행과 같음) 2. -----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

3. ~ 6. (생략)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제작비용을

----- 징수-----
-----.

제5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 영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탁) ① -----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영 제40조제2항-----

-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

10. 영 제53조-----
-

9. 영 제52조제1호-----
-

② -----
----- 다음 각
호의 자에게 -----
-----.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③ (생 략)</p> <p><u>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u></p> <p><u>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u></p> <p><u>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u></p> <p><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u></p> <p><u>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u></p> <p><u>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u></p> <p><u>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u></p> <p><u>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소수련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 다. 상정일자: 2024년 4월 25일
-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수련 의원)

- 가.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2)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안 제6조)
 - 4) 교통안전교육(안 제7조)
 - 5) 교통지도,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안 제8조 ~ 제9조)
 - 6)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10조)
 - 7)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소수련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 기존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2015. 7. 20. 제정, 2023. 6. 28. 일부개정)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최근 3년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상자를 확대시켜 어린이는 물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배됨이 없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여 타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소수련 의원)

의안번호	491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소수련, 최홍찬, 김미화, 정홍숙,
이의찬, 김현규, 권성하, 변준호,
김기준, 차성민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수립 등, 실태조사(안 제4조 ~ 제5조)
- 다.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안 제6조)
- 라. 교통안전교육(안 제7조)
- 마. 교통지도,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안 제8조 ~ 제9조)
- 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10조)
- 사.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엘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시행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제7조(교통안전교육), 11조(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추후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차성민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4년 4월 25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차성민 의원)

가. 제안이유: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3)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안 제6조 ~ 제7조)
- 4)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8조 ~ 제9조)
- 5) 지도점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 ~ 제11조)
- 6)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차성민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사업자의 저감실천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구청장이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차성민 의원)

의안번호	492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차성민, 정홍숙, 최홍찬, 권성하,
권종현, 김기준, 김현규, 변준호,
이의찬, 김미화, 소수련

1. 제안이유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다.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안 제6조 ~ 제7조)
- 라.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8조 ~ 제9조)
- 마. 지도점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 ~ 제11조)
- 바. 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모든 규정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
3.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4. 구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부터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의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등에 따른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내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 배치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 분산 사용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으로 소음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공사장
3.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발생 행위
4.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이동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

음·진동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4. 25.

안전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4일, 권성하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2024년 4월 25일

[제25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성하 의원)

가.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별표 등에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안 제7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안효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

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별표 등에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명시하고자 권성하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사항 명시하고, 안 제7조 및 별표 제5호의 구분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수수료를 포함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여야 하는 필수위임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지표: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이며, 법제처에서 필수조례 마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시 상위법령의 위임취지 반영 여부, 위임범위 준수 여부 등 평가기준에 부합하여야 함(법조문을 단순 재기재한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인용조문이 없거나 인용조문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필수위임조례 미인정 사례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2024. 9. 25. 일부개정(2024. 11. 23. 시행)으로 조례 별표에 반영하였으나 조례 목적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조례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위임사항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권성하 의원)

의안번호	493
------	-----

발의일자: 2025. 4. 14.

발의의원: 권성하, 정홍숙, 김기준, 차성민,
권종현, 변준호,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이의찬

1.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과 별표 등에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안 제7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증명발급수수료”를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제5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총 징수금액 (원)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 검사서			
4. 외국인 결핵 진단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1통	3,000	-
6.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

※ 제증명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p>																																										
<p>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p>	<p>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증명발급수수료(「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p>	<p>【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p>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총 징수금액 (원)</th></tr><tr><th>기본 수수료</th><th>검사료</th></tr><tr><td>1. 일반건강진단서</td><td rowspan="4">1통</td><td rowspan="4">500</td><td rowspan="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td></tr><tr><td>2. 건강진단서</td></tr><tr><td>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td></tr><tr><td>4. 외국인 결핵 진단서</td></tr><tr><td>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td><td>1통</td><td>3,000</td><td>-</td></tr><tr><td>6. 증명서 추가 발급</td><td>1통</td><td>300</td><td>-</td></tr></table>	구분	기준	총 징수금액 (원)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	4. 외국인 결핵 진단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통	3,000	-	6.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총 징수금액 (원)</th></tr><tr><th>기본 수수료</th><th>검사료</th></tr><tr><td>1. 일반건강진단서</td><td rowspan="4">1통</td><td rowspan="4">500</td><td rowspan="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td></tr><tr><td>2. 건강진단서</td></tr><tr><td>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td></tr><tr><td>4. 외국인 결핵 진단서</td></tr><tr><td>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td><td>1통</td><td>3,000</td><td>-</td></tr><tr><td>6. 증명서 추가 발급</td><td>1통</td><td>300</td><td>-</td></tr></table>	구분	기준	총 징수금액 (원)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	4. 외국인 결핵 진단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통	3,000	-	6.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
구분			기준	총 징수금액 (원)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																																											
4. 외국인 결핵 진단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통	3,000	-																																								
6.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																																								
구분	기준	총 징수금액 (원)																																									
		기본 수수료	검사료																																								
1.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적용																																								
2. 건강진단서																																											
3. 운전 면허 응시 및 적성 신체검사서																																											
4. 외국인 결핵 진단서																																											
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통	3,000	-																																								
6. 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																																								
<p>※ 제증명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p>	<p>※ 제증명발급수수료는 1통당 기본수수료와 검사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p>																																										